

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34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. 8.

발 의 자 : 신영대 · 전재수 · 김정호  
박수현 · 윤준병 · 김종민  
문금주 · 황명선 · 문정복  
한준호 · 염태영 · 김기표  
김용만 · 임광현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·종교·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.

그러나, 국내 취업자의 20%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 건강검진 기간에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여 대다수 자영업자가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실제로 연구조사에 따르면, 자영업자 10명 중 7명(69%)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근로자의 검진 불참 비율(10%)보다 7배나 높음.

이에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

진율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2조의8 신설).

##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8(소상공인의 의료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2조의8(소상공인의 의료 지원)</u></p> <p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소상공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.</u></p>